

광주·전남서도 美 쇠고기 반대 시위 ‘촛불집회’ 번진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릴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3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특별대책위(광우병 대책위)’는 오는 10일 오후 7시부터 광주시 동구 금남로 삼복서점 일대에서 촛불집회를 갖기로 했다. 광우병 대책위는 이에 앞서 8일 오후 광주YMCA에서 미국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비상시국회의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광우병 대책위는 6일 오후 광주에서 참여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책위는 기준에 친환경한 서명운동에 대한 성과를 오는 7일 발표하기로 했으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고, 네트즌들의 반대 집회가 계획된다.

에 따라 발표를 연기하고 이날 긴급히 대책회의를 가졌다.

여수YMCA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가칭 ‘광우병쇠고기 수입저지 여수시민행동’도 오는 9일 오후 여수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하는 촛불집회와 별도로 네트즌들이 참여하는 수입 반대집회도 열린다.

서울지역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정책반대시위연대’ 광주·전남모임은 10일 오후 3시 금남공원(옛 한국은행)에서 300여명 규모의 반대집회 개최를 계획 중이다. 이 단체 한 관계자는 “폭력적인 시위가 아닌 평화로운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사법처리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만약 촛

불집회 주최측이 정치적 구호나 발언을 하고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할 것을 권유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이럴 경우 현장에서 경고 후 해산 종용, 체증에 이은 사법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인터넷 모임 ‘미친소다넷’은 6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2, 3 일 행사에 이어 세번째다.

이날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와 인터넷 모임 등 전국 1천여개 단체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긴급대책회의’를 결성한 뒤 청계광장 촛불문화제에 합류했다.

또 인터넷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여의도 국립현대미술관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광우병 괴담’ 확산 막아라

‘17일 휴교’ 등 유포…광주·전남 교육당국 대책 고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 괴담’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교육당국과 학교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에게 유포되고 있는 괴담 중 대표적인 것은 ‘17일 등교기부 또는 휴교’, ‘인터넷 종량제로 요금 폭등’, ‘광우병 전염 소만 수입된다’ 등이다. 이 같은 괴담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인터넷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오전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회의를 가졌다. 시교육청은 우선 학생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상황 파악에 주력하기로 했다. 학교에 대한 공문 발송 등 특별한 지침은 일단 보류했다.

교육청은 광주의 경우 등교 거부 날짜인 17일이 5·18민중항쟁 28주년 전야제가 열리는 날이란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오는 9일과 10일 여수와 광주에서 ‘미국산 광우병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다는 점도 불안 요소 중 하나다.

나극동 광주여고 교장은 “학생들이 협력하게 대처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 직원들에게 토요일인 17일 비상대기자를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오전 일선 고등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광우병 괴담’과 관련한 상황을 체크했으나 큰 움직임은 없는 것을 파악했다”며 “학생들의 행동을 막기 위해 앞서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상무고 교사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인터넷이나 문자에서 오가는 말들을 농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 같았다”며 “반응이 애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을 긴급 소집,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이청 장성군수 무혐의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아온 이청 장성군수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오인서)는 6일 “지난해 12월 장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이 군수의 선거캠프에

서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사이에 금품이 오간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군수가 돈을 건네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히지 못해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선거운동을 돋는 대가로 돈을 준 선거운동원 이모(3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사이에

의 경우 인터넷이나 문자에서 오가는

말들을 농담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

같았다”며 “반응이 애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을 긴급 소집, 대책회

의를 갖기로 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어느 축산농의 비극

브루셀라병에 한우 14마리 폐사

빛더미 절망 속 함평 40대 자살

소를 키우며 부농의 꿈을 일궈온 40대 농부의 희망이 비극으로 끝났다. 지난 5일 새벽 5시30분께 함평군 나산면 이모(42)씨의 집에서 이씨가 음독, 사망했다. 필리핀 이주여성인 이씨의 부인 A(35)씨와 자녀 3명은 이씨가 휴대폰 둔기에 맞아 병원에 입원중이다. 경찰은 이씨가 부인·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체장애인인 이씨가 소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10여년 전. 이씨는 농·축산자금을 대출받아 우선 소 7마리를 사서 길렀다. 소 7마리는 어느새 22마리까지 늘어났다. 그 동안 이씨는 필리핀 여성 A씨와 결혼해 자녀 3명(아들 1명, 딸 2명)까지 낳았다.

소 키우는 재미에 빠진 이씨는 농 농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축산과 소를 들러갔다. 그러나 ‘소 50마리를 키워 저자식 호강시키겠다’는 이씨의 꿈에 며구름이 드리웠다.

기르던 소 22마리 중 5마리가 지난 2006년 11월 감전 사고로 폐



소와 함께 축산 부농의 꿈을 키워온 이씨의 축사가 주인을 잃은 채 텅비어 있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사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나머지 소 17마리 중 14마리가 법정전 염인 ‘브루셀라 병’에 감염돼 살처분됐다. 전염병 발병지로 분류되면서 소 시육도 6개월 이상 금지됐다. 살처분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조금 받았지만 농축협 대출금에 사채 등 7천300여만의 빚만 남았다.

한우 사육에 가족과 자신의 모친을 건 이씨는 후유증에서 힘들어졌다. 한우 사육에 가족과 자신의 모친을 건 이씨는 후유증에서 힘들어졌다. /이종행 기자 golee@/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밭코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문의

▶ 서울본사: 02-3445-0943
▶ 나주공장: 061-337-0571

개도둑 너무 심하게 때렸다가...

○ 개주인이 자신의 개를 훔쳐가는데 개도둑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히는 바람에 과잉 방위로 도둑과 함께 경찰서행.

○ 장성경찰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인 조선족 A(49)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30분께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사는 B(50)씨 소유의 개 사육장에서 시가 5만원 상당의 강아지를 훔쳤다는 것.

○ 개 사육업자 B씨는 강아지를 훔쳐가는 조선족 A씨를 목격하고 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려쳐 두개골 경막외출혈(뇌진탕)에 빠트렸다고.

○ 경찰은 개 주인의 신고로 A씨를 불법 체류자인 조선족 A(49)씨에게 상처를 입힐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지난 1년 이상 징역으로, 강제추행은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